광주시 평동 포사격장 인수 효과와 과제

땅값 타지역의 5% 수준 과학벨트 유치 힘 받는다

軍시설 대체부지 마련 불발탄 처리문제 숙제

강운태 광주시장과 윤광섭 육군 보병학교장이 11일 육군보병학교에서 광주시 광산구 평동·동백 군사훈련장 이전에 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협약서를 펼쳐보이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11일 '광산구 평동 군사훈련장의 소유권 이전'에 국방부와 원칙적인 합의를 함으로써 지난 60여년간에 걸친 지역 숙원사업을 단숨에 해소한 것은 물론, 지역 미래성장전략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일차적으로는 최근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군훈련장 부지를 첨단산업체 유치 및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확충 등에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도 막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추진되어 왔나**=평동 군훈련장은 지난 1948년 국방부에 소속된 이후 1951년부터 보병학교와 기계화학교 등 6개 부대가 포사격장과 전술훈련장 등으로 사용해왔다. 지난 1995년 상무대가 장성으로 이전하면서 평동 군훈련장 내 기갑 및 포병사격장은 함께 옮겨갔으나 박격포사격장과 전술훈련장은 현재까지 평동 군훈련장을 사용해왔다.

이와 관련, 강운태 광주시장은 수차례 국방부 및 군 관계자를 직접 찾아다니며 지속적으로 이전이 당위성을 강조하고 설득한 끝에 이전합의라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소유권 이전 어떻게**=광주시가 장성이나 영광 등지에 대체부지를 마련, 군사시설을 설치한 뒤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는 기존 평동 포사격장과 동백훈련장의 소유권을 광주시에 이전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평동·동백 훈련장의 부지를 감정평가, 부지가격이 대체부지의 평가액보다 많으면 광주시로부터 그 차액을 받게 된다.

일단 MOU가 체결된 만큼 앞으로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합의각서 체결, 실시계획승인 신청, 관계기관 협의, 실시계획 승인(국방부), 토지보상, 사업시행, 기부 및 양여의 과정의 거치게 된다. 광주시는 MOU체결 이후 종합적인 실무계획을 수립, 인수작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육군보병학교와 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남은 과제**=광주시로서는 최우선적으로 군사시설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전 예상부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광주시는 일단 평동 포사격장 부지의 대체부지로는 장성 제병협동훈련장 주변지역 181만5000㎡(55만평)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백 전술훈련장 이전부지로는 상무대 주변지역 396만㎡(120만평)을 생각하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이들 지역 자치단체와 물밑협상을 진행중이며, 이전 대상지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발탄 처리문제도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 어등산 테마파크 개발사업이 불발탄 처리문제에 발목이 잡혀 장기간 지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사격장으로 쓰인 평동 훈련장 역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계약서·보증금 공개하고 세입자 이주대책 시급"

'U대회 선수촌' 가결, 남은 과제는? 토론회

지난 4일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건립 지원 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이로 인한 광주시의 재정난 가중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임낙평)는 1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NGO센터에서 광주시·광주시의회·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U대회 선수촌 건설 보증 동의안 가결, 지역사회에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동의안 통과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요구했다.

변원섭 참여자치21 운영위원장은 "선수촌 건립지원 동의안은 시민을 담보로 보증을 선 것이나 다름없다"며 "시공사에 끌려다니지 말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계약서와 보증금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이어 "거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홍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사업이 어려우면 임대로 전환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발언은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주남식 광주시 U대회 지원단장은 "광주시가 선수촌을 건설할 경우 6600억~7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미분양 사태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며 "선수촌을 재건축과 연계하는 것은 조합원 스스로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되 선수촌 사용에 관해 시가 관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춘문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시민단체가 동의안 통과에 반대했지만 정치는 시민운동과 달리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 대다수가 찬성한 사안에 대해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

"선수촌 건립 지역업체 참여 방안 마련해야"

광주시의회 조영표 (민주·남구1)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11일 "2015년 U대회선수촌 건립공사 시 광주시가 업체에 해택을 준만큼 광주·전남지역 건설업체에 일정 지분을 주어 공동 도급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U대회선수촌 건립공사 시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취득세 인하 지방세수 부족분 2조 1000억…정부 전액 보전

당정청 회동 합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주택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키로 했다.

특히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을 2조1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정부는 지자체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공적자금기금에서 이를 전액(이자비용 포함) 인수키로 했다.

당정은 또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지난달 22일부터 소급해 전액 보전키로 했다.

당정청은 10일 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9인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칙에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11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허남식 부산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윤증현 기획재정·맹형규 행정안전 장관,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 등도 참석했으며, 지자체장 3명은 이 같은 원칙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얼마가 될지 모르나,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을 100% 보전해주기로 했고, 이와 관련한 지방채를 전액 인수키로 한다는 데 3명의 지자체장이 100%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당 정책위와 기재부·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시내 모처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원칙에 공감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지난달 22일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절반씩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자체들은 지방세인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이유로 일제히 반발해 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총리 대통령 전용기 타고 中 방문

청와대 배려…1999년 JP 이후 처음

12일 중국을 공식 방문하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통령 전용기(공군 2호기)를 타고 이동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김 총리는 12일 낮 성남공항에서 공군 2호기(B737-300)를 통해 출국, 3박4일간 후진타오 국가주석 예방,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2호기는 40여석 규모로 개조한 소형 전용기로, 지난달 회항 사태를 빚은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와 달리 중국, 일본 등 가까운 거리를 다녀올 때 이용된다.

총리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해외 방문에 나서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인 지난 1999년 4월 김종필 총리가 일본을 공식 방문하면서 전용기를 이용한 이후 처음이다.

이는 김 총리의 원활한 일정 소화를 위해 청와대 측에서 배려한 덕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총리는 애초 민항기를 이용할 경우 15일 보아오 포럼 참석을 마친 뒤 국내선을 이용해 광저우로 이동, 현지에서 하루 더 묵고 16일 저녁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전용기 이용으로 일정을 하루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김 총리에게 전폭적인 신임을 보이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헌재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정당추천제 합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 정당추천제는 유권자의 권리와 정당 활동 등 공익을 고려할 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인천 계양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이모씨가 정당추천제와 정당추천 후보의 투표용지 우선게재가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무소속 후보는 정당 지원을 받는 후보자와 힘들게 경쟁을 벌여야 해 현실적으로 공무담임권이 제한되지만, 선거권자들이 정당추천제 덕분에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알게 돼 공무담임권의 부당한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